[기자회견문]

**화석연료인 블루수소,**

**정부차원의 그린워싱 중단을 촉구한다.**

  정부는 당초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는 수소법을 화석연료 기반 수소인 블루수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전락시켰다.

  블루수소는 숨겨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과 함께 가스전 개발 등 화석연료 산업을 유지시켜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는 블루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일부를 계산에서 제외시켜 주는 등 화석연료 수소를 친환경으로 포장하고 있다.

블루수소가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미국의 에너지경제•재무연구소(IEEFA)는 탄소포집율이 96.2%에 달하더라도 블루수소 1kg을 생산하는데 15.4kg 가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처치 곤란인 수소 공급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수소 생산업자인 중부발전이 노후 가스화력발전을 수명연장하려 하는 시도도 포착되고 있다.

이처럼 블루수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솔루션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블루수소의 온실가스 영향이 청정수소 인증제를 통해 제대로 평가되는지 여부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평가기관의 산출 방식에 대한 통제와 감독권 없이 단순 위임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블루수소처럼 잘못된 솔루션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한다.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명확한 솔루션을 이행하기에도 시간이 촉박하다. 잘못된 솔루션을 바로잡는 데에 미래세대의 에너지를 쏟을 순 없다. 블루수소의 퇴출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진정한 솔루션 이행을 위해 헌법재판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블루수소를 청정수소로 둔갑시키는 현행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가 위헌임을 확인하라
* 하나, 중부발전, SK E&S 등은 기후위기 악화시키는 화석연료 확장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라
* 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그린수소만이 청정수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청정수소 인증제를 개편하라

**그린피스, 기후위기에너지전환보령행동,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청년기후긴급행동** (가나다순) **을 포함한 일반국민 72명**